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익산시 무암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2018년 4월 5일 목요일 (음 2월 20일) 제202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안전보호 융복합사업 정부 예타조사 통과

### 전북도 “내년부터 사업 시작”

섬유소재산업 활성화  
글로벌 시장 선도 기대

2027년 이후 9년간  
1168명의 고용유발 효과  
2035년 10조원 수입대체

전북도는 4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 육성사업’이 마침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은 산업현장에서 각종 위험 요소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입거나 착용하는 안전보호복 및 보호장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은 국가 산업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세계 안전보호 섬유시장은 2014년 353억불에서 2020년 524억불, 연평균 6.8% 수준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 및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수준도 선진국의 78% 수준, 표준 및 인증수준은 10~2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국가 안전보호 제품산업의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산업부, 예코융합섬유연구원과 함께 2014년부터 연구기획사업을 착수, R&D 기술개발 등 사업발굴을 꾸준히 준비해 왔다.

2015년말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여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종합추진 내용에 첨단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고도화를 위해 기술국산화, 제품화 확대 시급성을 명시

화하고 수많은 객관적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게 됐다.

전북도는 이를 계기로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핵심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목표로 하는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을 기획했다.

2015년 5월 12월에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 2016년 4월에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예타 심사를 거쳐 마침내 최종 통과됐다.

정부 차원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의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 의지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아 전북도가 미래형 첨단섬유산업을 육성하는 섬유융복합산업의 중심지로 향후 국민안전과 함께하는 섬유소재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안전보호제품산업 강국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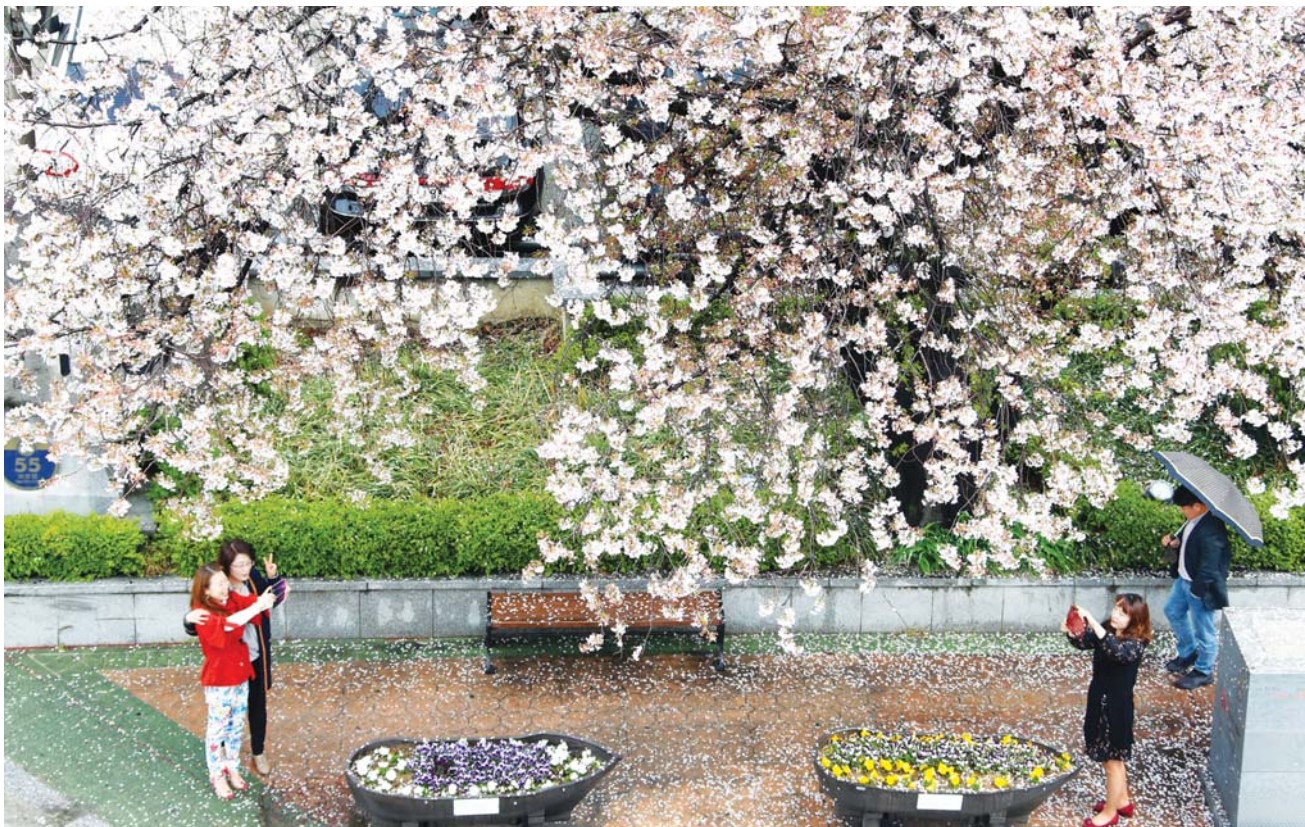
기대효과로는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로 본격적인 시장진출이 이루어지는 2027년 이후 9년간 약 1,168명의 직접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안전관련 제품들의 수입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글로벌 수준의 제품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약 50%의 수입대체를 가정할 경우 2035년 10조30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한다.

도 관계자는 “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 사업비가 무리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비가 내리는 날 벚꽃길에서 ‘찰칵’



4일 전주시 덕진구청 앞에 꽃망울을 활짝 터트린 벚꽃이 봄비에 떨어지면서 봄의 운치를 더하고 있다. 사진은 구청을 찾은 시민들이 벚꽃길을 걸으며 산책을 즐기는 도중, 스마트폰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靑 “개헌한다면 국민투표법 개정 협조않는 건 이율배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4일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국회가 개정작업에 서둘러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아직 상임위에 계류만 돼있고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임 실장은 “주지하다시피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서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며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투표법을 위한 상태로 방

“국회, 국민투표법 개정 신속하게 처리해야  
법 위반 방지, 직접민주주의 심각한 훼손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 확인 시급성”

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합의의 떠나 개헌의 진정성이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을 우선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투표법 개정 여부는 국회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급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키고 개헌의 진정성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며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서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오는 27일 이전에 국민투표법 개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22일 “4월27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를 할 수 없게 된다”며 “데드라인은 4월27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청와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데드라인이 23일이라는 해석을 새롭게 얻어놓은 상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관위 해석으로는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이 4월 23일이라고 한다”며 “4월 임시국회가 처리 시한이어서 오늘 촉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 매일 INDEX            |                        |
|---------------------|------------------------|
| 2면 - 전주 시내버스 결핵 없앤다 | 4면 - 전주 탄소산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
| 5면 - 학교협동조합 '얇' 개소식 | 16면 - 천호성 교육감 예비후보 인터뷰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